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3
----------	-----

2023. 6. 23.(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3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2023년 6월 9일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정범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과당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임원의 임기 등 현행 조례에 따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내 단위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와 학교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만료로 지위를 상실한 임원의 경우, (현행) ‘잔여 임기동안의 자격 상실’ 에서 → (개정안) ‘잔여임기를 유지’ 하도록 변경함(안 제4조)
-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가. 조례 개정이유

-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임원의 잔여 임기를 유지 하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 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백 없는 운영으로 각급학교의 학교운영 위원회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별 학교운영 위원회가 지역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창의

적인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교환과 의견제시, 협의와 논의를 통하여 단위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수련활동, 대학입학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초빙교사 추천,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임용·평가, 학교의 예산과 결산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이며, 이러한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중요하다 할 것임.

-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고 명시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도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도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를

인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제8항에는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위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위원들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임원의 잔여 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 만료로 지위를 상실한 임원의 경우, ‘잔여 임기 동안의 자격 상실’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잔여임기를 유지’ 하도록 변경한 것은 학생이 졸업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생이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가 다음연도 임원 구성 시기까지 발생될 수 있는 임원 공백과 그로 인한 협의회가 미개최되는 일 없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5조의 위원 의무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중요성에 대한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위원들의 인식을 높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임원의 임기 등 현행 조례에 따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 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위” 를 “임기 만료로 지위” 로, “임원의 잔여 임기 동안의 자격은 상실된다” 를 “잔여 임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임기) ① (생 략)</p> <p>② 임원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 장으로서의 <u>지위를 상실한 경우</u> 에는 <u>임원의 잔여 임기동안의</u> <u>자격은 상실된다.</u></p> <p>제5조(의무) ①·② (생 략)</p> <p><u><신 설></u></p>	<p>제4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임기 만료로 지위</u>----- ----- <u>잔여 임</u> <u>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u></p> <p>제5조(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u> <u>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관계 법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2012. 3. 21.>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1. 9. 24.>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1. 9. 24.>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28.>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2., 2010. 6. 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 3. 18.>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2020. 2. 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5.>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 2. 28., 2015. 9. 15., 2020. 4. 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⑥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 9. 15., 2020. 4. 7.>

⑦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 9. 15., 2020. 4. 7.>

⑧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8., 2015. 9. 15., 2020. 4. 7.>

제59조의2(회의 소집)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18.>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18.]